

몰려오는 계절 근로자…불법 브로커 차단 고심

전남 올 외국인근로자 2만명 배정 속 해남·완도·고흥 등 잇단 금품 갈취 여권·통장 압수 착취도…해외 송출단계 불법중개로 형사처벌 쉽지 않아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도 현실적 단속 수단 여전히 부족 '전전긍긍'

정부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올해 전남에만 2만 1000여명, 전국 10만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고질적인 불법중개,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구체적인 검거 대책도 없고 해외에서 모집 단계부터 자행되는 불법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법무부는 지난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증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국가·지자체·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모든 주체의 선발·알선·채용 기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면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처벌 조항만 신설됐을 뿐, 불법 중개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자를 모집할 때, 한국에 입국하기 전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선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 중개의 수익 통로로 압용된 사례도 해외에서부터 금품 갈취 등을 당한 사례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현지 송출업체와 모집책 등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4년 4~5월 사이 한국 입국에 앞서 모집책 등에게 1인당 150만 타카(1만 2000달러)를 지급했고, 입국 후에도 여행사를 통해 5200달러를 추가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노동자는 40명, 전체 피해액은 20만 달러, 한화로

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완도군 농·어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보고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접수됐다.

입국 자체는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지만, 입국하기 전부터 해외에서 협약 주선자들에게 1인당 17만 폐소(한화 400여 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입국 후에도 매달 임금에서 40여만원을 수수료 목적으로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고흥에서도 브로커가 계절노동자들의 급여 대부분을 착취하고, 이를 막기 위해 출국 전 보증금과 여권, 통장까지 압수해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절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때문에 브로커나 고용주에게 금품갈취·임금체불 등 피해를 겪고도 경찰이나 노동 당국에 신고하

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신고 후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근무 지로 갈 수 있는 기간까지 참고 버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번 법 개정에도, 국내 배정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불법 중개의 대부분이 해외 송출 단계에서 이뤄져 형사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이 민간 브로커가 음성적으로 기생하지 않도록 계절 이주노동자의 선발과 채용, 농어촌 배치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농어촌 고용주에 대한 이주인권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0만 9100명(예비 탄력분 1만 5000명 포함)으로 확정했고, 이중 전남에는 2만 1904명을 배정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검찰이 털렸다… 압수한 700억대 비트코인 분실

불법도박 범죄 수익금 압수 추정
보관물 확인 과정서 분실 드러나
광주지검 자체 조사선 "피싱 피해"

광주지검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압수 물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수사 중이다.

분실 시점은 지난해 6~7월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싱 피해"

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담긴 '콜드 월렛' 형태로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컴퓨터에 연결된 상태에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비트코인 지갑을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분실한 비트코인 액수와 출처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액수가 400억~700억원대에 달한다는 설이 돌고 있다.

비트코인 출처와 관련, 광주경찰청이 지난 2023년 4000억원대 해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부녀(父女)에게서 압수한 범죄 수익금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당시 경찰은 부녀를 압수수색해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때문에 압수수색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 1476개(현 시세 기준 1931억여원 상당) 비트코인이 전자 지갑에서 사라져 결국 322개(416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데 그쳤다. 이 때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은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압수된 322개 비트코인은 재판 과정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져 검찰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남 농민들 "배추 납품 대금 10억 못 받았다"

경찰, 농업회사법인 내사 착수

해남의 배추·절임배추 농민들이 특정 유통업체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배추 거래 대금을 못 받았다고 호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농민들에게 배추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농업회사법인 A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남 지역 10여명의 농가들이 지난해 11~12월 A사에 배추, 절임배추 등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못 받은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A사가 대금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를 미루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사기가 아닌 단순 재무불이행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피해자들 주장이다.

A사는 농가와 농산물 가공·유통업체 등 거래처를 연결해주는 중간 거래상(브로커)으로,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바 '벤더'로 불리는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해당 법인에 시가 9억 5000만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g당 700원 기준으로 1357t 규모, 절임배추로만 보면 20kg기준 3만여 상자 규모다.

피해자들은 지난 6일부터 해남군 일대에 '절임 배추, 배추를 납품하고 피해를 본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해남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박재용(54)씨는 "지난해 해당 법인을 통해 배추를 거래했는데 돈을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해 1억 2000만원 중 처음에는 4000만원만 주고 잠적하더니, 현수막이 걸리고 나서도 2000만원만을 보내주는 데 그쳤다. 이제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예전처럼 농가가 소규모로 직접 주문받아 처리하는 방식은 거의 사라졌고, 농가와 절임배추 공장, 절임배추 가공업체와 마트 등 대형 거래처 사이에 제3 업체가 끼는 거래가 늘었다"며 "납품을 받아가면서도 그간 쌓인 신뢰를 내세워 내년에 주겠다고 계속 미루다가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이 피해를 봄고 고소·고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자자체 등 공공이 아니라 유통 질서를 정리하고 제약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과거부터 유사한 '대금 빼먹기'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을 토대로 피해호소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남뿐 아니라 무안 양파 등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 바 있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목포해경이 지난 24일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적발해 다가가자 중국 선원들이 그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불법조업 중국 어선 흉기 휘두르며 저항

가거도 해상서 치어까지 짹쓸이
목포해경, 2척 나포 28명 체포

목포해경은 신안군 가거도에서 불법 어업 활동을 한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A·B호의 선원 28명을 체포해 경제수역어업 주권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원들은 해경이 A 호에 승선하자 도주 및 저항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선원 1명이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다행히 흉기에 찔린 사람은 없었다. 해경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인의 보호법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험
보험 가입 필
<http://X&3@%NET>

알바 떠는 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용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용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